



[한국인의 정체성] 한국인이 보는 역사, 민족, 국가, 그리고 세계

한국인의 국가 정체성과 민족 정체성: 15년의 변화

강원택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1. 서론

장구한 시간 동안 우리 민족은 한반도라는 지리적 공간 속에서 하나의 정치적 공동체를 유지하며 살아왔다. 그 역사적 과정에서 다른 민족과의 접촉과 교류가 있었고 그러한 관계는 인구 구성에도 반영되었겠지만, 한국인들은 인종적으로,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 대체로 동질성을 유지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와 민족 정체성 간의 구분은 그다지 큰 의미를 갖지 못했다. 서구에서 민족 국가가 근대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명되었거나’ ‘상상된’ (Hobsbawm 2004, 41; Anderson 1991) 것이었다면, 한국에서는 근대 이전에도 이미 국가와 민족은 하나의 형태로 결합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민족과 결합된 국가의 정체성은 중국이나 일본과 같은 이민족의 침략과 공세에 대한 저항 속에서 더욱 강화되어 왔다. 즉 한국인이라는 것은 한반도라는 제한된 공간에 거주하고 있고, 일본과 중국과는 언어적으로, 문화적으로, 민족적으로 구분되는 하나의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한국에서 국가 정체성과 민족 정체성의 구분이 의미를 갖게 된 것은 한반도가 분단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하나의 국가가 민족의 지리적 범위를 모두 포괄하지 못하게 되면서, 하나의 민족이 남북의 두 개의 국가로 나뉘게 되면서, 이 두 가지 정체성은 서로 충돌하게 되었다. 더욱이 사실상 완전한 단절의 상태로 70년 이상을 보내면서 남북의 주민들은 서로에 대한 기억과 공유된 경험을 갖지 못하게 되었다. 이러한 단절은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과거와 다른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해 가도록 이끌었다. 강원택(2006)은 남한의 젊은 세대가 그들의 정체성의 지리적 공간을 한반도의 남쪽, 즉 대한민국에서만 찾으려 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를 ‘대한민국 민족주의’라고 부른 바 있다. ‘대한민국 민족주의’는 혈연적, 언어적, 문화적 동질성에서 벗어나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정체(polity)라고 하는 정치적 요소와 긴밀하게 연계된 특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과거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남한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체성이 강화되어 가는 것과 동시에, 남한 사회 내부의 인구 구성의 문화적, 인종적, 지역적 다양성이 증대되어 왔다. 우선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 이주민 등 외국에서 한국에 들어와 거주하게 된 외국인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 이는 민족 정체성과 관련하여 남한 사회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남한 사회의 인종적 구성이 다양화될 뿐만 아니라,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적지 않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장기간 체류하는 외국인의 경우와는 달리, 결혼이나 귀화를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의 수가 늘고 있다. 또한 중국 출신 한민족, 즉 조선족의 경우에는 같은 민족이지만 국적이 다르다는 점에서 한국 사회에 민족 정체성과 국가 정체성 간의 문제를 야기했다. 그런 점에서 한국 사회는 그동안 정체성과 관련하여 서로 상반된 두 가지 흐름을 동시에 경험해 왔다. 즉 한편으로는 정체성의 ‘분리’와 또 한편으로는 정체성의 ‘다양화’가 동시에 진행되어 온 것이다. 이러한 추세는 이 프로젝트가 진행되어 온 지난 15년 동안 더욱 가속화되어 왔다. 한국 사회 내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는 2005년에는 74만여 명이었지만, 5년 뒤인 2010년에는 126만여 명으로, 2015년에는 거의 190만 명으로 증가했고, 2019년 말까지는 252만여 명으로 늘어났다. 2005년에 비해서 2019년에는 국내 체류 외국인의 수가 거의 네 배 증가한 것이다.¹⁾ 조선족의 경우에도 한국에 거주하는 인구가 2005년 167,589명이었던 것에 비해 2019년에는 701,098명으로 증가했다.²⁾ 그러나 이러한 인종적, 문화적 다양성은 지난 15년간 그 규모에 있어 크게 증가했지만, 질적인 측면에서 의미심장한 변화가 일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지난 15년간 일어난 보다 주목할 변화는 남북 간의 관계에 대한 것이다. ‘대한민국 민족주의’가 국가 정체성과 관련된 것이라면, 그동안 남북 간 정치체제의 문제는 지난 15년간 그 차이가 더욱 분명하게 남한 사회에 각인되고 있다. 2005년 이후 전개된 남북 간 주요 사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북한에서는 2006년 10월 제1차 핵실험을 실시했고 2009년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와 2차 핵실험을 실시했다. 2013년 3차 핵실험, 2016년 4차, 5차 핵실험과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SLBM) 시험 발사를, 2017년에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했다. 이로 인해 한반도 주변에서 미국과의 군사적 긴장 관계가 고조되었다. 또한 2011년 김정일의 사망과 함께 김정은으로 3대 세습을 이어갔다. 그 이후 2013년 김정은은 자신의 고모부 장성택을 사형에 처했고, 2017년에는 이복형인 김정남을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독살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1) 체류 외국인 관련 자료: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2020. 체류 외국인 현황.

탈북민 관련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017. e-행복한통일.

통일부. 2020. 북한이탈주민정책 최근현황.

2) 법무부. 2005. 출입국관리통계연보.

법무부. 2020.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자료.



남북 관계를 살펴보면 2007년 10월 노무현-김정일 남북정상회담이 있었지만, 2008년에는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으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었다. 2010년 3월에는 천안함 피격 사건,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 포격 사건이 일어났다. 2016년에는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을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2018년 2월 평창 동계 올림픽에서 북한의 김여정이 김정은의 친서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한 이후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졌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싱가포르 회담도 2018년 실시되었다. 이처럼 2005년 이후 남북 관계는, 2018년 초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악화되었고, 남북 간 교류 협력도 사실상 중단되었다. 이에 비해 남한 사회에서는 2007년과 2017년 선거에서 여야 간 정권 교체가 두 차례 발생했고, 2008년 쇠고기 광우병 관련 촛불집회, 2016년 박근혜-최순실 관련 촛불집회, 그리고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경험했다. 또한, 문화적으로 아이돌 그룹 BTS 열풍,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의 미국 아카데미 작품상 수상, 손흥민 등 스포츠 스타의 활약, 그리고 2007년부터 2016년까지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재임 등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도 높아졌다. 결국 지난 15년 동안 일어난 이러한 한국 사회의 변화와 함께, 북한은 핵무장, 김정은의 3대 세습의 과정을 거치면서 남한 사회와의 이질감은 더욱 커졌다. 이러한 이질감의 증대는 한국인들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것이 이 글에서의 출발점이다. 이런 점에 주목하여 이 글에서는 지난 15년간 일어난 한국인들의 정체성 변화를 북한, 통일, 영토 등 국가 정체성의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2. 기존 연구의 검토

국가 정체성은 개별 시민을 국민 국가라는 정치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통합시키고 외부의 공동체와 구분하게 만든다. 이는 개인이 정치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다고 느끼는 소속감,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정서적 애착의 감정이라고 할 수 있다.

시민권(citizenship)은 국가 정체성의 근원에 대한 것이며 소속감과 애국심은 국가 정체성의 '정치화된 집단 의식(politicized group consciousness)'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국가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은 이념형으로서 시민-영토적(civic-territorial) 요인과 인종-혈통계보적(ethnic-genealogical) 요인의 두 차원으로 나뉘 볼 수 있다(윤광일 2017, 7-8). 우리 상황과 관련해서 본다면 전자는 국가 정체성, 후자는 민족 정체성을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치적 관점을 중시하는 국가 정체성의 관점에서 볼 때 정치 공동체는 정치적으로 평등한 시민으로 불리는 구성원들이 시민 문화와 이데올로기를 공유하는 공동체가 된다(이대희 2015, 50). 한편, 인종-혈통적 측면을 강조한 정체성의 관점에서 볼 때, 영토는 과거 일정 시점에서 공동의 삶과 역사를 공유함으로써 그 구성원이 정체성을 확인하는 상징과 기억의 공간이 된다. 그러나 시민-영토적 차원, 즉 정치적 측면을 강조하는 정체성의 관점에서 영토는 애착심과 기억의 차원을 넘어 영토에 대한 법적, 정치적 권리 즉 영토에 대한 지배권, 영토적 자결(territorial



self-determination)에 대한 믿음을 수반한다 (이대희 2015, 57-59).³⁾ 따라서 시민-영토적 차원에서 영토는 기억과 역사의 공간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 공간을 지배할 수 있는 주권을 갖고 정치적 독립을 확립한 공간이다.

우리나라는 남북 간 분단이 되지 않았더라면 시민-영토적 차원과 인종-혈통계보적 차원의 정체성 간에 갈등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영토에 대해서도 분단되지 않았더라면 공유된 기억의 역사적 공간으로서의 의미와 정치적으로 자결권과 지배권을 갖는 공간으로서의 의미가 분리되지 않았을 것이다. 분단의 기간이 짧았다면 이 두 가지 차원의 정체성 간의 갈등은 분단이라는 현실적인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남북 통합의 강력한 심리적, 정서적 추진력으로 작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분단의 기간이 길어지고 남북 간의 교류와 접촉이 사실상 단절된 상황에서 이 두 가지 정체성은 분리로 인한 모순의 해소를 추구하기보다, 현실 정치적인 상황에 적응해 가는 방향으로 강화되어 가게 된다. 분단 상황에 대한 익숙함, 공유된 역사와 기억을 갖지 않는 새로운 세대의 등장 등은 인종-혈통계보적, 혹은 민족 정체성보다는 영토적 차원의 정체성, 혹은 국가 정체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이끌게 되는 것이다.

물론 한국 사회에서 ‘민족’의 ‘통일’은 매우 강한 규범적 성격을 갖는 목표로 자리 잡아 왔다. 따라서 남북한 간 이질성의 증대에 대한 불편함이나 통일이 가져올 수 있는 불확실함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민족 정체성은 쉽사리 부인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실제로 기존 연구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국가 정체성의 강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민족 정체성과 국가 정체성이 공존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장승진(2010)은 한국 종합사회조사 자료의 분석을 통해 시민적 정체성과 인종적 정체성 간 높은 상관관계가 있으며, 이러한 두 가지 정체성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보았다. 또한, 박종철 외(2016, 7-94)에서는, 한국 사회에는 종족적 의미의 한민족 정체성과 시민적 차원에서 의 대한민국 정체성이 혼재되어 있는데, 그 특성은 연령이나 학력 등의 요인에 의해 각기 다른 특성이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윤광일(2017, 13) 역시 세대에 따른 정체성의 차이를 지적했는데, 40대 이하 세대에서는 인종 정체성보다 시민 정체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데 비해 50대 이상에서는 두 정체성에 대해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국가 정체성과 민족 정체성이라는 두 가지 정체성 간의 갈등이 앞으로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을지 아니면 정치적, 시민적 의미의 정체성이 보다 강화되어 갈 것인지 한국인들의 인식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 통일과 그 이후의 시대를 고려한다면 ‘서로 달라진’ 독자적인 영토적, 정치적 정체성의 강화는 그만큼 남북 간 통합을 어렵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3) 이대희는 종족과 민족으로 이 두 가지 정체성을 구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설명하는 데에는 민족 정체성과 국가 정체성으로 구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되어 여기서는 종족을 민족 정체성으로, 민족을 국가 정체성으로 표현한다.



3. 한국인의 조건

지난 15년간 진행된 한국 사회의 정체성 변화를 추적하기 위해, 우선 ‘진정한 한국인’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조건을 살펴보았다. 설문항에는 모두 일곱 가지의 조건이 제시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는 것
- 2) 대한민국의 국적을 유지하는 것
- 3) 생애 대부분을 대한민국에서 사는 것
- 4) 한국어를 사용하는 것
- 5) 대한민국의 정치제도와 법을 따르는 것
- 6) 한국인의 혈통을 가지는 것
- 7) 한국의 역사를 이해하고 한국의 전통과 관습을 따르는 것

이러한 일곱 가지 항목 중에서 1), 3)은 지리적, 6)은 인종적, 4), 7)은 문화적, 2), 5)는 정치적 의미의 정체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네 차례 조사에서 보인 응답률의 변화가 <그림 1>에 정리되어 있다. <그림 1>에서 우선 알 수 있는 점은 지난 15년 동안 전반적으로 한국인이 되기 위한 조건이 점차 강화되어 왔다는 사실이다. 거의 대부분의 항목에서 그래프가 좌하단에서 우상단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선 지리적 의미의 정체성을 보면,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는 것”에 대한 응답은 2005년 81.9%에서 2020년에는 89.7%로 높아졌지만, 2010년 이후 대체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다. “생애 대부분을 대한민국에서 사는 것”에 대한 응답은 가장 분명한 차이를 보여, 2005년 64.6%에서 2020년에는 80.8%로 높아졌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응답률은 전체 항목 중 가장 낮았다. 즉, 공간적, 지리적 의미에서 한국인을 정의하는 태도는 상대적으로 그 의미가 낮게 나타났다.

한편, 문화적 의미의 정체성과 관련된 질문 항목에서는 대체로 응답률이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한국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응답은 2005년 87.0%에서 2020년 91.8%로 높아졌는데 특히 2020년 조사에서의 응답 비율이 높아졌다. “한국의 역사를 이해하고 전통과 관습을 따르는 것”에 대한 응답은 꾸준히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는데, 2005년 80.9%에서 2010년 85.9%, 2015년 86.0%로 나타났고 2020년에는 89.4%로 높아졌다.

정치적 의미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인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응답은 2005년 88.2%에서 2020년에는 95.2%로 높아졌고, “대한민국의 정치제도와 법을 따르는 것”에 대한 응답은 2005년 77.5%에서 2020년에는 무려 94.3%로 높아졌다. “국적 유지”에 대한 응답은 네 차례 조사에서 모두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여 왔다. 이에 비해 “정치제도와 법을 따르는 것”에 대한 응답은 2005년 조사에는 77.5%로 나타나 다른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비율이 상당히 낮은 편이었지만, 그 이후 87.3%(2010), 88.4%(2015)로 높아졌고 2020년 조사에는 94.3%로 높아졌다. 이에 비해 인종적 의미의 정체성과 관련된 “한국인의 혈통을 가지는 것”이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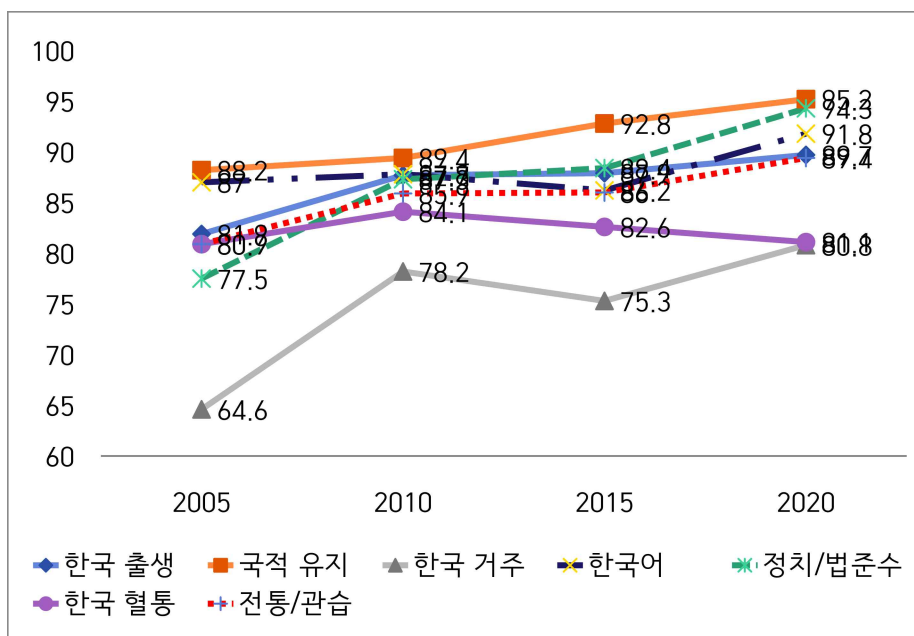


80.9%(2005) → 84.1% (2010) → 82.6% (2015) → 81.1% (2020)으로 대체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처럼 2020년 조사에서 가장 높은 응답의 비율은 ‘대한민국 국적 유지’(95.2%), ‘정치제도와 법을 따르는 것(94.3%)으로 나타났다. 이 두 가지는 정치적 의미의 정체성을 나타낸다. 이에 비해 “한국인의 혈통을 가지는 것”과 같은 인종적 의미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즉 종족적 의미의 정체성보다 시민적 의미, 정치적 의미의 정체성이 지난 15년 사이에 크게 중요해진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 한국인이 되기 위한 조건(2005-2020)

(단위: %)



■ 자료: 동아시아연구원·중앙일보 공동 한국인의 국가정체성 조사(2005)

동아시아연구원·고려대 아시아문제연구소·중앙일보 공동 한국인의 국가정체성 조사(2010, 2015)

동아시아연구원·성균관대 동아시아 공존·협력 연구센터·중앙일보 공동 한국인의 국가정체성 조사(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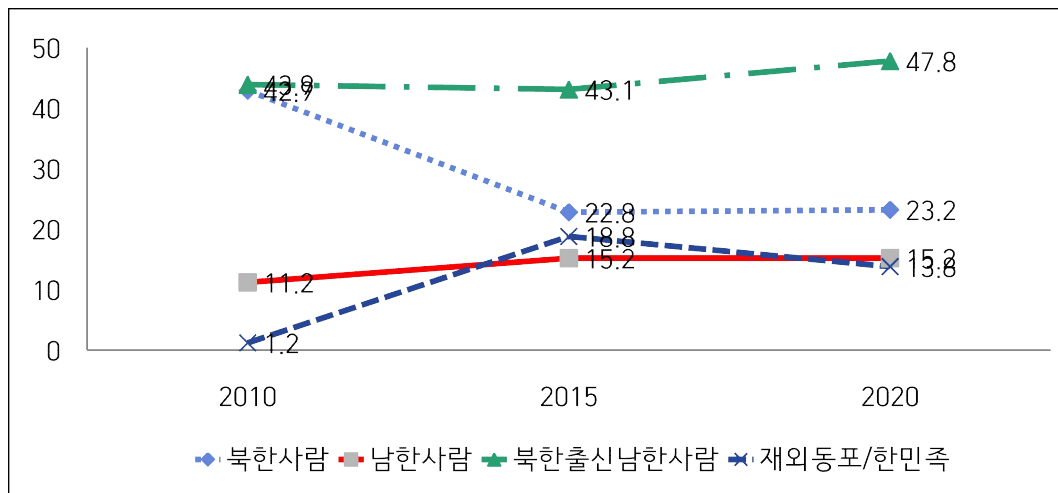
전체적으로 본다면, 대한민국이라는 정치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혈연보다 국적이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민족 정체성보다는 국가 정체성이 보다 중시되는 모습이 발견된다.

민족 정체성과 국가 정체성 간의 미묘한 변화를 살펴보고자 할 때 가장 흥미로운 사례는 아마도 탈북민일 것이다. 두 정체성이 충돌하는 지점에 탈북민 집단이 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탈북민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그림 1〉에서의 발견점을 토대로, 이번에는 탈북민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앞서 언급한 대로, 남한 사회에서 북한은 민족 정체성과 국가 정체성이 상호 충돌하는 지점이 되었다. 그런 점에서 북한을 탈출하여 남한 사회에 정착한 탈북민에 대한 인식은 이 두 가지 정체성 간의 미묘한 관계를 잘 보여주는 한 가지 지표가 될 수



있다. <그림 2>에 2010년부터 10년간의 태도의 변화가 정리되어 있다. 전반적으로 탈북자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은 커져 온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눈에 띄는 인식의 변화는 탈북민이 ‘북한 사람’이라는 비율이 크게 줄어 들었다는 점이다. 2010년 조사에서 북한 사람이라는 응답은 42.9%였지만 2015년 이후에는 22-23% 수준으로 크게 줄어 들었다. 이에 비해 ‘남한 사람’이라는 응답은 2010년 11.2%에서 그 이후에는 15.2%로 늘었다. 또한 ‘북한 출신 남한 사람’이라는 응답 비율도 2010년 43.9%에서 2020년에는 47.8%로 늘었다. 탈북민을 남한 사람으로 인정하는 이 두 가지 응답을 합한 비율은 2010년 55.1%, 2015년 58.3%, 2020년 63.0%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한편, 탈북민을 미국이나 일본 교포처럼 재외동포나 한민족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2010년에 비해서는 높아졌다. 전체적으로 볼 때 탈북민에 대한 인식은 점차 수용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보인다. 남한 사람으로 간주하는 비율이 전체 응답자의 2/3 수준으로 높아졌고, 남한 사람으로까지는 아니더라도 다른 외국에서 살다가 귀국한 교포와 같이 그들을 인식하는 비율도 높아졌다. 이처럼 남한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비율이 높아진 것은, 북한 출신이라 해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또 남한의 정치제도와 법을 따르고 있다는 정치적 속성의 정체성, 시민적 의미의 정체성에 대한 중요성의 강조와 맥을 같이 하는 결과로 보인다.

<그림 2> 탈북민에 대한 인식의 변화 (단위: %)



■ 자료: 동아시아연구원·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중앙일보 공동 한국인의 국가정체성 조사(2010, 2015)
동아시아연구원·성균관대 동아시아 공존·협력 연구센터·중앙일보 한국인의 국가정체성 조사(2020)

<표 1> 탈북민, 조선족, 북한 주민에 대한 인식(2020년 조사) (단위: %)

	완전 남이다	남에 가깝다	대한민국 국민에 가깝다	대한민국 국민이다
탈북민	8.0	31.1	51.4	9.5
조선족	12.9	47.1	36.8	3.3
북한 주민	13.5	46.7	35.0	4.9

■ 자료: 동아시아연구원·성균관대 동아시아 공존·협력 연구센터·중앙일보 한국인의 국가정체성 조사(2020)



〈표 1〉에서 보듯이, 탈북민에 대한 인식은 조선족이나 북한 주민에 대한 것과는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대한민국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응답이 탈북민의 경우에는 61.4%의 응답률을 보였지만, 조선족이나 북한 주민에 대해 그 응답률은 각각 40.1%, 39.9%에 그쳤다. 조선족과 북한 주민에 대한 인식에 큰 차이가 없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정치적, 시민적 정체성에 대한 중요성이 이러한 차이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무엇에 의해 영향을 받았을까? 2020년 조사 자료를 토대로 한국인의 조건에 대한 태도와 그것에 미치는 요인에 대해 분석해 보았다. 종속변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보았다. 하나는 위에서 살펴본 ‘진정한 한국인이 되기 위한 조건’ 7개 항목에 대한 응답을 모두 합쳐 본 것이다. 항목별로 ‘① 매우 중요하다, ② 대체로 중요하다, ③ 별로 중요하지 않다, ④ 전혀 중요하지 않다’로 하고 있기 때문에, 7개 항목을 더한 응답은 최소 7에서 최대 28까지의 범위가 된다. 숫자가 작을수록 ‘한국인의 조건’을 보다 엄격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종속 변수는 정치적 정체성에 대한 것이다. 앞서 〈그림 1〉에서 본 대로, ‘국적 유지’와 ‘정치 제도와 법을 따르는 것’이라는 데 대한 중요성이 최근 들어 보다 강조되고 있다. 이 두 가지 항목에 대한 응답을 따로 정리했는데, 최소 2에서 최대 8까지의 범위가 될 것이다.

독립변수로는 성별, 연령, 소득, 학력 등의 사회경제적 변인과, 북한 인식, 한국 민주주의 평가, 한국 역사에 대한 평가, 그리고 한국 사회에 대한 전반적 자긍심 등을 포함했다. 북한 인식은 북한에 대한 좋고 싫음의 정도와 북한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을 변수로 포함했는데, ‘한국인의 조건’이 북한에 대한 거부감이나 거리감과 관련이 있는 것인지 살펴보기 위함이다. 한국 민주주의 평가는, 특히 정치적 정체성과 관련하여, 민주주의 진전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북한과 다른 정치체제라는 점이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살펴보기 위한 것이었다. 한국 역사에 대한 평가와 한국 사회에 대한 자긍심은 대한민국의 정치적, 경제적, 국제적, 문화적 위상이 향상된 것과 관련된 전반적 만족감, 자부심의 증대와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자랑스러움’의 변인은 민주주의, 국제 위상, 경제 성취, 사회보장, 보건 의료, 과학기술, 스포츠, 예술 문화, 군사력, 공정과 평등, 시민의식 등 11가지 항목을 합친 것인데, 주요 항목에 대한 응답이 긍정적으로 편향된 것이 많아 모두 합쳐 변수로 사용했다. 분석 결과는 〈표 2〉에 정리되어 있다.



〈표 2〉 선형 회귀분석: 한국인 조건 인식에 미친 요인

한국인의 조건	변수	모델 1	모델 2
		7개 항목 총합	정치적 정체성
사회경제 변인	성별	-0.00	0.01
	연령	-0.13*	-0.06
	소득	-0.06	-0.10*
	학력	0.04	-0.01
북한	북한 호오도	0.05	0.04
	북한 인식	0.10*	0.09**
민주주의	민주주의 평가	0.03	0.01
역사 평가	한민족 역사 평가	0.05	0.16***
자긍심	자랑스러움	0.05	0.08**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	0.25*	0.16*
R ²		0.13	0.07

■ 자료: 동아시아연구원·성균관대 동아시아 공존·협력 연구센터·중앙일보 한국인의 국가정체성 조사(2020)

■ 주 1: * p<0.01, ** p<0.05, *** p<0.1

수치는 모두 표준화 계수 β

■ 주 2: 종속변수

7개 항목: 한국출생 + 국적 유지 + 한국 거주 + 한국어 + 정치제도와 법 + 혈통 + 전통과 관습

정치적 정체성: 국적 유지 + 정치제도와 법

(1-매우 중요, 2-대체로 중요, 3-별로 중요하지 않음, 4-전혀 중요하지 않음)

■ 주 3: 독립변수

북한 호오도: 0-100

북한 인식: 1-우리, 2-형제, 3-이웃, 4-남, 5-적

민주주의: 0-전혀 민주적 아님 10-매우 민주적

한민족 역사 평가: 1-매우 자랑스러움, 2-자랑스러운 편, 3-그저 그렇다, 4-부끄러운 편, 5-매우 부끄럽다.

자랑스러움: 민주주의 + 국제적 위상 + 경제성취 + 사회보장 + 보건 의료 + 과학기술 + 스포츠 + 예술문화 + 군사력 + 공정평등 + 시민의식(1-매우 자랑스럽다 2-대체로 자랑스럽다 3-별로 자랑스럽지 않다, 4-전혀 자랑스럽지 않다)

한국인으로서 자긍심(대한민국 국민이고 싶다): 1-매우 그렇다, 2-대체로 그렇다, 3-그저 그렇다, 4-별로 그렇지 않다, 5-전혀 그렇지 않다

분석 결과 흥미로운 차이가 발견되었다. 7개 항목을 종합한 모델 1에서는 연령, 북한 인식,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가 많을수록 한국인의 조건을 보다 엄격하게 인식하고 있다. 또한 북한을 ‘우리’에 가깝게 인식할수록 한국인의 조건을 엄격하게 바라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으로서 자긍심이 강할수록 전반적으로 한국인의 조건을 엄격하게 인식했다. 그런데 이러한 특성은 정치적 정체성과 관련된 한국인의 조건에서 보다 분명하게 나타났다. 모델 2에서는 가계소득에 따른 시각의 차이가 확인되었다. 소득이 올라갈수록 정치적 속성에서의 한국인의 조건을 엄격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령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른 차이는 모델 2에서도 모델 1과 유사한 영향이 확인되었다. 북한을 ‘우리’에 가깝게 느낄수록 정치적 특성에서의 한국인의 조건을 엄격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에 대한 좋고 싫음의 정도, 곧 호오도에 대해서는 통계적 유의미함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북한 주민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이 한국인



의 조건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흥미롭다. ‘대한민국 민족주의’의 관점에서 해석할 때, 북한을 적으로 본다면 사실 북한 주민은 한국인의 범주에서 벗어나 있게 될 것이다. ‘우리’의 범주에 가까운 것으로 인식해야만 사실 한국인의 조건이 의미를 가질 것이다. 북한 자체에 대한 관심보다 북한 주민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 여부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런 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모델 2에서는 한국에 대한 자부심, 자긍심과 관련된 변수들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민족 역사에 대한 자긍심, 11가지 영역에서 한국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 등 세 변인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국가적 자부심,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이 강할수록 한국인의 조건을 더욱 엄격하게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으로 올수록 한국인의 조건을 보다 엄격하게 인식하는 것, 특히 국적 유지나 정치제도-법의 준수 등 정치적 측면에서 정체성을 한국인의 조건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강해지는 것은 무엇보다 전반적으로 한국 사회에 대한 한국인들의 자부심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정치적 측면에서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경향의 강화는 ‘단일 민족’과 같은 혈연을 강조해 온 과거의 모습과는 차이를 보인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로 보인다. ‘한국인의 혈통’을 가진 탈북민이나 북한 주민을 바라보는 인식 역시 이와 같은 정치적 정체성에 대한 강조라는 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4. 영토와 정치 공동체에 대한 정체성

‘대한민국 민족주의’가 강화되었다면 북한을 바라보는 인식에도 변화가 생겼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국가 정체성은 정치적이고 영토적으로 ‘우리’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인데 이와 관련하여 북한은 중요한 고려 대상이다. 북한과 남한을 하나의 정치적 공동체로 볼 것인지 아니면 별개의 것으로 구분할 것인지에 대한 태도는 정치적 정체성에 대한 특성을 살피는 데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된다. 우리나라 헌법 제3조에서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인식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영토적으로 ‘우리’는 어디까지의 범위를 한정하는가 하는 점이다. 헌법 규정대로라면, 북한을 포함하는 한반도 전체가 될 수밖에 없다. 일부에서는 조선족이 거주하는 만주 지역까지를 ‘우리’의 범위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DMZ를 경계로 한반도는 분단되어 있고 대한민국의 공권력은 북한 지역에는 유효하지 않다. 두 번째는 정치 공동체, 즉 국가의 범위를 어떻게 인식하는가 하는 점이다. 영토는 국가권력이 유효하게 행사되는 지리적 공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한반도 전체가 대한민국 영토라면 북한은 국가로 인정될 수 없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남한과 북한은 별개의 독립적 국가처럼 활동하고 있고 더욱이 남북한은 모두 1991년 유엔에 동시 가입했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헌법 규정과 달리, 영토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북한은 남한과 별개의 정치적 실체로 존재하고 있다. 여기의 관심은 이러한 규범적, 선언적 차원에서의 북한과 현실적, 일상적 차원에서의 북한 중에서, 한국인들은 어디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느냐 하는 점이다.

우선 국가라는 정치 공동체의 차원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표 3>에서는 “남한과 북한은 현실적으로 별개의 독립적인 국가이다.”라는 주장에 대한 응답 패턴의 변화를 정리한 것이다. 2005년 조사에서 ‘별개의 독립적 국가’라는 데 동의한 비율은 79%였는데, 2010년, 2015년 조사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2020년 조사에서 그 비율은 90.2%로 높아졌다. 물론 그 이전 조사에서 나타난 80% 정도의 응답률도 매우 높은 수치라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남한 주민의 거의 대다수는 북한을 ‘다른 나라’로 보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2020년 조사에서 나타난 90% 이상의 응답은 이제 사실상 거의 모든 남한 주민들은 북한을 별개의 국가로 간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표 3> 남한과 북한은 별개의 독립적인 국가이다(2개 항목).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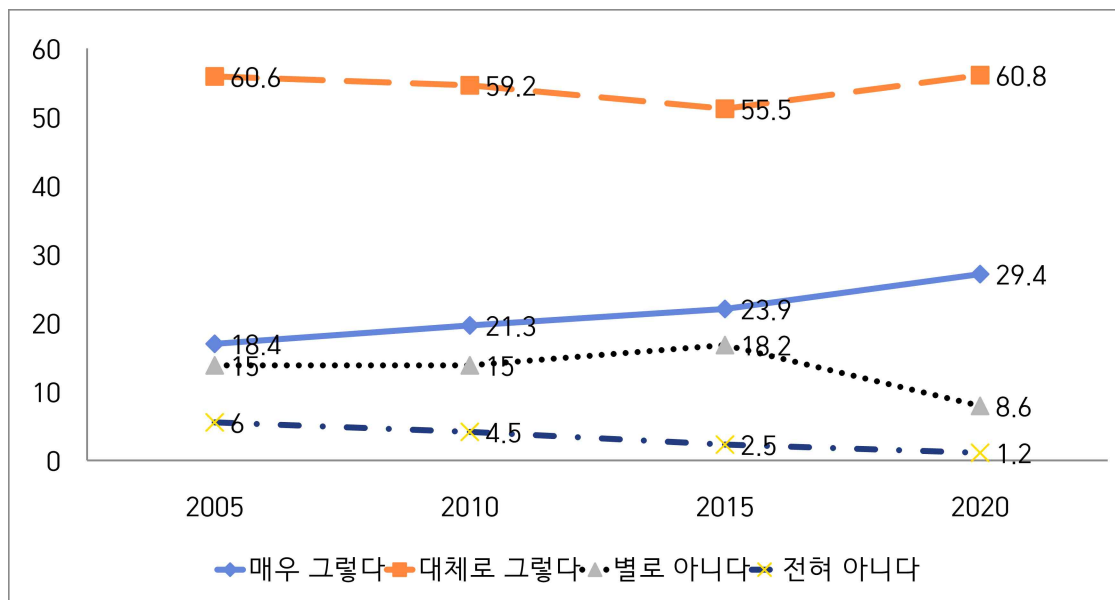
조사 연도	2005	2010	2015	2020
그렇다	79.0	80.5	79.3	90.2
아니다	21.0	19.5	20.7	9.8

■ 자료: 동아시아연구원·중앙일보 공동 한국인의 국가정체성 조사(2005)

동아시아연구원·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중앙일보 공동 한국인의 국가정체성 조사(2010, 2015)

동아시아연구원·성균관대 동아시아 공존·협력 연구센터·중앙일보 공동 한국인의 국가정체성 조사(2020)

<그림 3> 남한과 북한은 별개의 독립적인 국가이다(4개 항목). (단위: %)



■ 자료: 동아시아연구원·중앙일보 공동 한국인의 국가정체성 조사(2005)

동아시아연구원·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중앙일보 공동 한국인의 국가정체성 조사(2010, 2015)

동아시아연구원·성균관대 동아시아 공존·협력 연구센터·중앙일보 공동 한국인의 국가정체성 조사(2020)

<표 3>의 결과를 보면, 지난 15년간 응답 패턴은 2020년에 와서 급격히 변화한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응답의 강도에 있어서는 북한과 분리된 남한만의 정체성이 꾸준히 강



화되어 왔다. <그림 3>은 응답 항목을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별로 아니다’, ‘전혀 아니다’ 등 네 개로 구분하여 질문에 대한 응답의 강도의 변화 추이를 살펴본 것이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남한과 북한이 독립국가라는 데 대해 ‘매우 그렇다’고 강하게 긍정적인 응답의 변화 추이이다. 2005년 18.4%에서 2010년에는 21.3%로, 2015년 조사에서는 23.9%로 계속해서 높아졌고, 2020년에는 29.4%로 크게 증가했다. 지난 15년 동안 꾸준히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11%나 증가되어 왔다. 이에 비해 ‘대체로 그렇다’는 응답은 대략 60%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한편, ‘전혀 아니다’는 응답 역시 꾸준히 낮아져 왔다. 2005년 6%에서, 2010년에는 4.5%로, 2015년에는 2.5%로 그리고 2020년에는 1.2%로까지 낮아졌다. 원래 이에 대한 응답 비율이 낮아서 그 차이가 크지는 않지만, 응답률이 낮아지는 추세는 분명하게 나타났다. ‘별로 아니다’는 응답 역시 15-18% 선에서는 2020년 조사에서는 8.6%로 크게 줄어들었다. <표 3>과 <그림 3>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지난 15년 동안 북한을 ‘다른 국가’로 간주하고 남한만을 ‘우리의 정치 공동체’로 바라보는 인식이 꾸준히 강화되어 왔으며, 특히 2020년 무렵에 그런 인식의 정도가 더욱 뚜렷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번에는 이런 정체성의 변화가 세대별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했다. 대한민국으로 국한된 정치적 정체성의 강화가, 통일에 대한 회의감이 큰 젊은 세대에서만 나타나는 특성인지, 아니면 사회 전반적으로 나타난 인식의 변화인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표 4>에는 남한과 북한을 별개의 독립 국가로 보는지에 대한 연령 집단별 응답을 정리했다.

<표 4> 남한과 북한은 별개의 독립적 국가이다: 세대별 추이 (단위: %)

	2005		2010		2015		2020	
	그렇다	아니다	그렇다	아니다	그렇다	아니다	그렇다	아니다
20대	71.3	28.7	82.4	17.6	78.5	21.5	89.6	10.4
30대	78.2	21.8	79.5	20.5	75.7	24.3	88.2	11.8
40대	82.5	17.5	81.2	18.8	79.2	20.8	92.6	7.4
50대	80.4	19.6	82.4	17.6	78.1	21.9	91.9	8.1
60대 이상	84.0	16.0	77.2	22.8	84.2	15.8	89.0	11.0
카이제곱	12.49 p<0.05		2.49 p=0.65		5.14 p=0.27		3.22 p=0.52	

■ 자료: 동아시아연구원·중앙일보 공동 한국인의 국가정체성 조사(2005)

동아시아연구원·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중앙일보 공동 한국인의 국가정체성 조사(2010, 2015)

동아시아연구원·성균관대 동아시아 공존·협력 연구센터·중앙일보 공동 한국인의 국가정체성 조사(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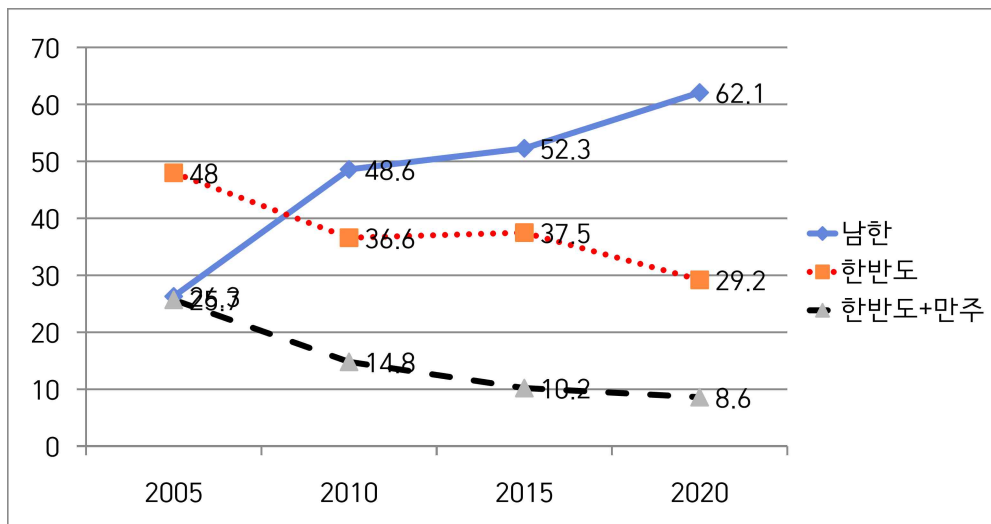
2005년 조사 결과에서는 세대별 시각의 차이가 나타났다. 20대 젊은 연령 집단에서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 응답이 높았는데, 20대에서 아니라는 응답은 28.7%였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그러한 응답의 비율은 대체로 낮아지는 패턴을 보였다. 2010년 이후 조사에서는 세대별로 뚜렷한 패턴의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2010년의 경우에는 60대 이상에서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높았지만, 그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더욱 흥미로운 변화는 20대 집단에서의 응답 패턴으로 2005년에 비해 2010년 조사에서는 ‘별



개의 국가가 아니다'라는 응답이 10% 이상 하락했다. 2005년 28.7%였던 응답률은 2010년에는 17.6%로 낮아졌다. 2005년 조사를 제외하면, 연령별 응답의 패턴의 차이가 크지 않게 나타났고 카이제곱 검정에서도 통계적 유의미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0년 조사 결과에서는 연령과 무관하게 전반적으로 남한과 북한이 별개의 독립적 국가로 보는 시각이 강해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으로 올수록 연령과 무관하게 한국 사회에서 북한을 '우리'와 다른 별개의 국가로 보는 인식이 강해졌다.

이번에는 영토적 관점에서의 정체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그림 5>는 '우리'의 영토적 범위를 어디까지로 생각하는지 그러한 인식의 변화 추이를 정리한 것이다. 언뜻 보기에 뚜렷한 변화 추이를 확인할 수 있다. 남한 지역이 '우리의 영토'라는 응답이 2005년 26.3%에서, 2010년에는 48.6%, 2015년에는 52.3%, 그리고 2020년에는 62.1%로 크게 증가했다. 우리 영토가 남한 지역에만 국한된다는 응답이 지난 15년 사이에 2.4배 증가했다. 2005년에는 전체 응답자의 1/4 정도가 남한 지역만이 우리 영토라고 응답했는데, 2020년에 그러한 응답의 비율은 60%를 넘어섰다. 이에 비해 헌법에 규정된 대로, 한반도가 우리 영토라고 응답한 비율은 꾸준히 감소했다. 2005년에는 전체의 절반 가까운 48%의 응답자가 한반도가 우리 영토라고 했지만 2020년에 그 비율은 29.2%로 감소했다. 한편, 2005년에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만주까지 우리 영토라고 응답한 비율이 25.7%였는데, 이에 대한 응답률도 그 이후 꾸준히 하락하여 2020년에는 8.6%에 머물렀다. 앞에서 분석한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하는 응답으로, 최근 들어 남한 지역과 대한민국 정제에 대한 일체감이 강화되어 가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림 4> 영토에 대한 정체성: 남한 지역만이 우리 영토 (단위: %)



■ 자료: 동아시아연구원·중앙일보 공동 한국인의 국가정체성 조사(2005)

동아시아연구원·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중앙일보 공동 한국인의 국가정체성 조사(2010, 2015)

동아시아연구원·성균관대 동아시아 공존·협력 연구센터·중앙일보 공동 한국인의 국가정체성 조사(2020)

이번에는 세대별로 영토에 대한 정체성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표 5>에서 보듯이 흥미로운 세대별 인식의 변화가 확인된다. 2005년 조사에서는 전체적으로 한반도가 우



리 영토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50대와 60대 연령층에서 이에 대한 응답의 비율이 높았다. 우리 영토가 한반도라는 응답은 50대의 경우 59.7%, 60대 이상은 57.4%였다. 이에 비해 20대, 30대의 경우에 그 비율은 40% 내외였다. 2010년 조사에는 남한이라는 응답의 비율이 2005년에 비해 크게 높아졌지만, 대체적인 응답의 패턴은 2005년과 비슷해서 한반도라는 응답이 50대, 60대 이상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15년에도 남한이라는 응답이 전반적으로 높아졌지만 50대에서는 오히려 줄어들었고 대신 한반도라는 응답이 44.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20년에도 한반도라는 응답은 40대와 50대에서 가장 높았다.

그런데 세대별로 볼 때 가장 두드러진 특성은 20대의 응답이다. 네 차례 조사에서 모두 ‘남한 지역’만이 우리 영토라는 응답률이 전 세대 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05년 36.5%에서, 2010년에는 57.4%로 높아졌고, 2015년에는 67.1%, 그리고 2020년에는 73.2%로 나타났다. 20대의 경우 4명 중 3명이 영토적 정체성은 남한 지역에서 찾고 있다. 다른 세대에서 남한 지역이 우리 영토라고 응답한 비율도 최근으로 올수록 높아졌다. 다른 연령 집단에서의 응답률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30대: 30% → 48.1% → 54% → 66%

40대: 21.1% → 47.1% → 51.5% → 60.8%

50대: 14.4% → 46.9% → 43.8% → 54%

60대 이상: 24.3% → 43.5% → 47.7% → 59.4%

전반적으로 볼 때, 젊은 연령층일수록 영토적 정체성이 남한 지역에 국한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는 패턴을 보이지만, 지난 15년 사이에 연령과 무관하게 우리 사회에서 영토적 정체성이 남한 지역만으로 국한하는 인식이 매우 강해져 왔다고 할 수 있다.

〈표 5〉 세대별 영토에 대한 정체성

(단위: %)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카이제곱
2005	남한	36.5	30.0	21.1	14.4	24.3	39.09 p<0.00
	한반도	39.7	41.1	49.8	59.7	57.4	
	한반도+만주	23.7	28.9	29.1	25.9	18.3	
2010	남한	57.4	48.1	47.1	46.9	43.5	11.62 p=0.17
	한반도	30.3	37.6	34.1	39.4	41.9	
	한반도+만주	12.2	14.3	18.8	13.8	14.5	
2015	남한	67.1	54.0	51.5	43.8	47.7	22.66 p<0.01
	한반도	25.1	35.8	39.4	44.3	40.7	
	한반도+만주	7.8	10.2	9.1	11.9	11.6	
2020	남한	73.2	66.0	60.8	54.0	59.4	18.55 p<0.05
	한반도	21.0	27.0	32.7	33.0	30.8	
	한반도+만주	5.7	7.1	6.4	13.1	9.8	

■ 자료: 동아시아연구원·중앙일보 공동 한국인의 국가정체성 조사(2005)

동아시아연구원·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중앙일보 공동 한국인의 국가정체성 조사(2010, 2015)

동아시아연구원·성균관대 동아시아 공존·협력 연구센터·중앙일보 공동 한국인의 국가정체성 조사(2020)



그렇다면 어떤 요인이 이러한 정체성 강화에 영향을 주었을까? 정체성에 영향을 준 요인을 찾기 위해서 남한과 북한이 별개의 국가라는 정치 공동체적 의미의 정체성과 영토적 의미의 정체성에 대해 각각 이항 로지스틱 분석을 실시했다. 종속 변수는 남한과 북한이 별개의 독립적 국가인지 아닌지, 그리고 남한만이 우리 영토인지 아닌지에 대한 것이다. 독립변수로는 네 가지 범주를 고려했는데, 첫 번째는 사회경제적 범주로 성별, 연령, 학력, 가계 소득 등의 변수를 포함했다. 두 번째는 북한 범주로 북한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 그리고 북한에 대한 좋고 싫음의 정도를 변수로 삼았다. 세 번째는 통일에 대한 것으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 정도, 그리고 통일이 남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의 여부를 변수로 포함했다. 그리고 네 번째 범주로는 민주주의를 포함했는데, 정치 공동체나 영토적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정치체제의 차이를 고려한 것인지 알아보기 위함이었다. 남한 민주주의의 현 상황에 대한 평가를 변수로 포함했다. 이에 대한 분석 결과가 <표 6>에 정리되어 있다.

영토적 정체성과 관련해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우리 영토를 남한만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앞의 <표 5>에서 본 대로, 젊을수록 우리 영토가 남한에 국한된다고 보는 시각이 강하게 나타났다. 그런데 다른 범주에서 영토적 정체성에 영향을 미친 변수는 모두 북한과 관련된 것뿐이었다. 북한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이 멀수록, 즉 ‘적’에 가깝게 느낄수록, 또한 북한에 대한 거부감의 정도가 강할수록 영토적 정체성을 남한에만 국한하는 특성을 보였다. 즉 영토적 정체성을 남한만으로 규정하는 데는 ‘북한’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게 작용했다. 이에 비해 정치 공동체와 관련된 정체성, 곧 남한과 북한을 별개의 국가로 볼 것인지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는 분석 결과 다른 특성이 나타났다. 영토적인 것에 비해 보다 많은 변인의 영향이 확인되었다. 사회경제적 변인 중에서는 가계 소득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소득이 올라갈수록 남한과 북한이 별개의 국가라는 인식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북한에 대한 호오도 변수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북한이 싫게 느껴질수록 별개의 국가로 인식할 확률이 높아졌고, 통일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수록 별개의 국가로 간주하는 인식이 강해졌다. 그런데 가장 흥미로운 결과는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의 영향이다.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의 수준을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남한과 북한을 별개의 국가로 보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민주주의 평가의 차이가 주는 정치 공동체에 대한 정체성 태도의 차이는 99%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이항 로지스틱 분석: 정체적, 영토적 정체성

범주	변수	우리 영토 남한 지역에 국한 (그렇다 1 아니다 0)	남북 별개의 독립적 국가 (그렇다 1, 아니다 0)
사회경제적 변인	성별(남성)	-0.28 ***	-0.18
	연령	-0.02*	0.01
	학력	-0.12	0.09
	가계 소득	-0.05	0.16 **
북한	북한 인식	0.34*	0.01
	북한 호오도	-0.01**	-0.02*
통일	통일 필요성	-0.06	0.26***
	통일 남한에 이익	-0.10	0.03
민주주의	한국 민주주의 평가	-0.04	0.16*
상수		2.21*	-0.19
Nagelkerke R ² (분류정확도)		0.10 (66.3%)	0.08 (90.4%)

■ 자료: 동아시아연구원·성균관대 동아시아 공존·협력 연구센터·중앙일보 한국인의 국가정체성 조사(2020)

■ 주 1: * p<0.01 **p<0.05 *** p<0.1

■ 주 2: 사회경제적 변인: 성별, 나이, 학력, 가계소득

북한 주민 인식: 1-우리, 2-형제, 3-이웃, 4-남, 5-적

북한 호오도: 0(가장 싫음)-100(가장 좋음)

통일 인식: 1-빨리 통일, 2-여건 봐서 속도 조절, 3-서둘 필요 없다, 4-굳이 할 필요 없다

통일 남한에 이익: 1-매우 이익, 2-다소 이익, 3-별로 이익 아님, 4-전혀 이익 아님

한국 민주주의 평가: 0-전혀 민주적 아님 10-매우 민주적

이런 결과는 매우 흥미롭다. 남한 지역만을 우리의 영토로 간주하는 영토적 정체성에는 북한에 대한 태도가 영향을 미쳤다. 즉 북한에 대한 거부감이나 적대감이 클수록 북한 까지를 포함하는 한반도를 우리의 영토, 즉 지리적 공동체의 영역으로 간주하는 인식이 줄어들었다. 그런데 이에 비해 정치 공동체, 즉 국가와 관련된 인식에서는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북한에 대한 호오도뿐만 아니라,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평가가 반영되었다. 즉 정치체제에 대한 인식이 남한과 북한을 별개의 국가로 간주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이것은 북한을 ‘우리’가 아닌 다른 국가로 간주하는데 민주주의라는 정치체제에 대한 평가가 고려된다는 점에서 혈연적, 인종적 정체성으로부터 최근으로 올수록 정치적 의미의 정체성이 남한 사회에서 강화되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5. 결론

지금까지 한국인의 조건, 영토적 의미와 정치 공동체라는 차원에서 지난 15년 동안 네 차례의 조사를 통해 나타난 한국인들의 태도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진정한 한국인이 되기 위한 조건’에 대한 인식은 지난 15년 동안 강화되어 왔다. 특히 주목할 점은 ‘국적의 유지’나 ‘대한민국의 정체제도와 법을 준수하는 것’과 같은 정치적 차원의 조건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어 왔다는 점이다. 2020년 조사에서 이 두 조건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에 비해 혈통에 대한 강조는 최근으로 올수록 그 비율이 낮아졌다.



이러한 특성은 탈북민에 대한 인식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탈북민은 민족적 정체성과 정치적 정체성이 교차하는 지점에 놓인다는 점에서 한국 사회에서의 인식의 변화를 살펴보는 데 도움을 준다. 최근으로 올수록 탈북민을 한국 국민으로 간주하는 비율이 높아져 왔는데 이는 정치적, 시민적 정체성을 중시하게 된 인식의 변화와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한국인이 되기 위한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데에는 ‘국가적 자부심’이라는 변수가 크게 작용했다. 특히 정치적 특성을 지닌 한국인의 조건에 대해서는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 한민족 역사에 대한 자긍심, 그간의 성취에 대한 자랑스러움 등의 변인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사회의 발전에 대한 자부심 속에서 혈연적 특성보다 대한민국이라는 정치적, 시민적 의미의 정체성이 강화되어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특성은 영토 및 정치공동체와 관련된 ‘우리’의 범위에 대한 인식에서도 잘 나타난다. 지난 15년 동안 ‘우리’가 속한 지리적 공간을 남한만으로 국한하여 바라보는 인식이 매우 강해졌다. 이러한 태도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한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라는 영토 조항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전 연령층에서 모두 나타났다지만, 특히 젊은 세대에서 남한 지역만을 우리의 영토로 간주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러한 영토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는 무엇보다 북한에 대한 태도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북한에 대한 거부감, 거리감이 클수록 영토적 정체성을 남한 지역에만 두려는 경향이 강해졌다.

한편, 남한과 북한이 분리된 별도의 독립 국가라는 인식도 최근으로 올수록 높아져 왔다. 2005년 조사에서 별도의 국가라고 한 79%의 응답률은 2020년 조사에서는 90%를 넘었다. 특히 강하게 긍정하는 응답률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단순한 수치의 증가 이상으로 정치적으로 분리된 정체성이 보다 강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남한과 북한을 별개의 국가로 간주하는 시각에는 북한에 대한 거부감의 정도,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영향을 미쳤지만, 이와 함께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평가 역시 이러한 정체성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쳤다. 즉 북한을 남한과 ‘다른 국가’로 바라보는 데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정치체제에 대한 인식과 평가가 반영된 것이다.

결국 이러한 결과는, 지난 15년 동안 한국인들의 정체성에는 혈연적, 인종적 의미의 민족 정체성보다, 시민적, 정치적 의미의 국가 정체성이 강화되어 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2005년 조사 결과를 두고, “혈연에 기초한 막연하고 애매한 한민족, 한국인이라는 자기 정의로부터, 이제는 보다 구체적이면서도 근대적 속성을 함께 내포한 ‘대한민국 민족주의’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강원택 2006, 38)라고 평가했는데, 이제 그 속성은 시간이 갈수록 이전에 비해 훨씬 강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북한에 대한 정부의 접근 역시 혈연적, 민족적 입장만을 강조하는 것으로는 우리 사회의 충분한 지지를 얻어내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과거 북한 문제를 둘러싼 남한 사회의 이른바 ‘남남 갈등’은 6.25 전쟁이나 그 이후의 군사적, 이념적 대립을 겪어온 노령 세대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었지만, 이들은 민족적 동질성, ‘원상



복구'라는 의미에서의 통일에 대해 공감했다. 하지만 이 장에서의 연구 결과가 보여주듯이, 이제 남한 사회는 영토적으로나, 정치 공동체라는 차원에서 북한과 구분되는 별개의 정체성이 매우 빠른 속도로 강화되어 가고 있다. 젊은 세대에서 그런 특성이 보다 강하게 나타나기는 하지만, 특정 세대를 넘어 한국 사회 전반에 걸친 태도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 사회의 성장에 대한 자부심과 민주주의 진전에 대한 긍정적 평가로 인해 '대한민국 민족주의'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굳건하게 점차 공고화되어 가고 있다.



참고문헌

- 강원택. 2006. “한국인의 국가정체성과 민족정체성: 대한민국 민족주의.” 『한국인의 국가 정체성과 한국정치』. 강원택 편, 15-38. 서울: 동아시아연구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017. e-행복한통일. <http://webzine.nuac.go.kr/sub.php?number=914> (검색일: 2020. 6. 15).
- 박종철 · 이상신 · 현인애 · 송영훈 · 정한울. 2016. 『남북한 주민의 통일국가정체성 인식조사』. 서울: 통일연구원.
- 법무부. 2005. 출입국관리통계연보. https://www.hikorea.go.kr/ptimg/moj_sts/2005/index.html (검색일: 2020. 4. 25).
- _____. 2020.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자료. <http://www.immigration.go.kr/immigration/1570/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aW1taWdyYXRpb24lMkYyMjglMkY1Mjc3MTIlMkZhcnRjbFZpZXcuZG8lM0ZwYXNzd29yZCUzRCUyNnJnc0JnbmRIU3RyJTNEJTI2YmJzQ2xTZXEIM0QlMjZyZ3NFbmRkZVN0ciUzRCUyNmlzVmld01pbmUlM0RmYWxzZSUyNnBhZ2ZUIM0QxJTI2YmJzT3BlbldyZFNlcSUzRCUyNnNyY2hDb2x1bW4lM0QlMjZzcmNoV3JkJTNEJTI2> (검색일: 2020. 6. 12).
- 윤광일. 2017. “한국인의 국가정체성의 정치심리학.” 『문화와 정치』 4(4): 5-41.
- 윤민재. 2002. “남북한 통합에 대한 정치사회학적 연구.” 『한국사회과학』 24(2): 63-93.
- 이대희. 2015. “민족의 개념.” 『21세기정치학회보』 25(3): 45-64.
- 장승진. 2010. “다문화주의에 대한 한국인들의 태도.” 『한국정치학회보』 44(3): 97-119.
- 조홍식. 2005. “민족의 개념에 관한 정치사회학적 고찰.” 『한국정치학회보』 39(3): 129-145.
-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2020. 체류 외국인 현황. http://www.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tsIdxSearch.do?idx_cd=2756&stts_cd=275601&freq=Y (검색일: 2020. 5. 7).
- 통일부. 2020. 북한이탈주민정책 최근현황. <https://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NKDefectorsPolicy/status/lately/> (검색일: 2020. 6. 15).
- Anderson, Benedict. 1991. *Imagined Communities: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London: Verso.
- Citrin, Jack, and David O. Sears. 2014. *American Identity and the Politics of Multiculturalism*.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ausbawm, Eric. 2004. 『만들어진 전통』. 장문석, 박지향 공역. 서울: 휴머니스트.



부록

진정한 한국인의 조건

(단위: %)

진정한 한국인의 조건	조사 연도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모름/무응답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는 것	2005	81.9	17.7	0.4
	2010	87.7	12.2	0.1
	2015	87.9	12.0	0
	2020	89.7	10.3	0
대한민국의 국적을 유지하는 것	2005	88.2	11.1	0.7
	2010	89.4	10.5	0.1
	2015	92.8	7.3	0
	2020	95.2	4.8	0
생애 대부분을 대한민국에서 사는 것	2005	64.6	34.7	0.7
	2010	78.2	21.5	0.3
	2015	75.3	2.8	0
	2020	80.8	18.9	0.3
한국어를 사용하는 것	2005	87.0	12.6	0.4
	2010	87.8	12.2	0
	2015	86.2	13.7	0
	2020	91.8	8.0	0.2
대한민국의 정치제도와 법을 따르는 것	2005	77.5	20.6	1.9
	2010	87.3	12.4	0.3
	2015	88.4	11.6	0
	2020	94.3	5.6	0.1
한국인의 혈통을 가지는 것	2005	80.9	18.3	0.8
	2010	84.1	15.4	0.5
	2015	82.6	17.4	0
	2020	81.1	18.6	0.3
한국의 역사를 이해하고 전통과 관습을 따르는 것	2005	80.9	18.3	0.8
	2010	85.9	14.0	0.1
	2015	86.0	14.0	0
	2020	89.4	10.5	0.1

■ 자료: 동아시아연구원·중앙일보 공동 한국인의 국가정체성 조사(2005)

동아시아연구원·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중앙일보 공동 한국인의 국가정체성 조사(2010, 2015)

동아시아연구원·성균관대 동아시아 공존·협력 연구센터·중앙일보 공동 한국인의 국가정체성 조사(2020)



■ **저자:** **강원택**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영국 런던정치경제대(LSE)에서 정치학 박사를 취득하였다. 한국정치학회장, 한국정당학회장을 역임하였다. 주요 연구 분야는 한국 정치, 의회, 선거, 정당 등이다. 주요 논저로는『한국 정치의 결정적 순간들』(2019), 『사회과학 글쓰기』(2019), 『한국 정치론』(2019), 『시민이 만드는 민주주의』(2018, 공저), 『대한민국 민주화 30년의 평가』(2017, 공저), 『대통령제, 내각제와 의원정부제』(2016) 등이 있다.

■ **편집:** 서주원 EAI 연구원

문의: 02-2277-1683 (ext. 206) jwseo@eai.or.kr

-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EAI는 어떠한 정파적 이해와도 무관한 독립 연구기관입니다.
- EAI가 발행하는 보고서와 저널 및 단행본에 실린 주장과 의견은 EAI와는 무관하며 오로지 저자 개인의 견해를 밝힙니다.

발행일 2020년 10월 17일

[한국인의 정체성] 한국인이 보는 역사, 민족, 국가, 그리고 세계 편

“한국인의 국가 정체성과 민족 정체성: 15년의 변화” 979-11-6617-030-0 95340

재단법인 동아시아연구원

04548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58, 909호 (을지로4가 삼풍빌딩)

Tel. 82 2 2277 1683 Fax 82 2 2277 1684

Email eai@eai.or.kr Website www.eai.or.kr